

'이태원 참사' 용산구청장·前용산경찰서장 등 내일 구속심사

이임재 첫 구속영장은 지난 5일 기각 허위 상황보고서 작성 관여 혐의 추가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의혹 등을 받는 이 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을 비롯한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경찰·구청 관계자 4명이 오는 23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오는 23일 오전 10시30분께 이 전 서장과 송 모 전 용산경찰서 112상황실장, 오후 2시께 박 구청장과 최모 안전재난과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전날 이 전 서장과 박 구청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전 서장과 송 전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선 구속영장은 지난 5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 전 서장은 헬리콥터 추락 기간 경력을 투입해야 한다는 안전 대책 보고에도 사전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와 이태원 참사 당일 현장에 늦게 도착하는 등 지휘를 소홀히 한 혐

의를 받는다.

이번에는 참사 당일 오후 11시5분께서야 이태원파출소에 도착했음에도 48분 전인 오후 10시17분 도착했다는 허위 내용의 경찰 상황보고서가 작성된 데 관여했다는 혐의도 추가됐다. 특수본은 이 전 서장이 용산경찰서 소속 경찰관 A씨가 작성한 보고서를 보고받고 직접 검토한 뒤 승인까지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송 전 실장은 참사 당시 현장 책임자로서

지휘 및 보고를 소홀히 하고, 112 신고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다.

박 구청장 등 용산구청 관계자들은 재난·안전 관련 1차적 책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장 및 소관 부서장으로서 헬리콥터 추락 기간 이태원 일대에 대한 사전 안전대비 계획 수립이나 사후 대처가 부적절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서선욱기자



분주한 제설작업 눈이 내린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관계자들이 제설작업을 하고 있다.

자녀 유령 채용하고 횡령자금 유흥비 '핑퐁'

국세청, 일부 공익법인 탈루 사례 공개 이사장 개인 보험료를 기부금으로 대납

국세청은 21일 공익법인의 탈루 행위에 대한 공익성 검증에 강화하고 있다며 일부 법인의 탈루 사례를 공개했다.

법인 이사장이 출연재산의 매각 대금을 유흥비나 가사 경비 등 사적으로 사용한 사례, 이사장 자녀를 거짓 채용해 고액 급여를 지급하는 등 사례가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 기업 계열의 공익법인 A사, B사는 기업 사주로부터 특정 계열사 주식을 각각 3%, 5%를 받았다. A사와 B사는 계열사 주식을 법정한도 5% 이하로 각각 보유 중이나, 사주가 공익법인 A사와 B사에 기부한 계열사 주식을 합산하면 주식 보유 비율이 8%로 법정 보유 한도(5%)를 초과한다. 이는 동일 계열사 복수의 공익법인을 이용해 세법상 허용되는 주식 보유 기준을 위반한 행위다. 국세청은 A사와 B사에 주식 초과 보유분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했다.

또 다른 공익법인 C사는 이사장 자녀를 채용한 것으로 가장해 고액의 급여를 지급했다. 국세청은 근무내역을 전산 분석한 결과 같은 시기에 C사와 다른 회사에 근무한 혐의가 포착됐다. C사 이사장 개인이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를 공익법인이 받은 기부금으로 장기간에 걸쳐 대신 납부한 사실도 드러났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에 따르면 공익법인이 출연 받은 재산을 공익목적사업 외에 쓰면 재산가액에 증여세를 부과한다. 국세청은 C사가 허위계상한 인건비와 보험료 대납액 등 공익목적사업 외 사용금액에 증여세를 과세했다.

공익법인 D사는 이사장이 출연재산 매각 대금을 불법 유흥비와 가사경비 등 사적 경비에 사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현행 상·증세법에서는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매각하면 그 매각 대금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고, 3년 안

에 90% 이상 써야 한다.

D사는 전용계좌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지 않고, 출연 받은 부동산 매각 대금을 일반계좌로 수령했다. 국세청은 D사에 공익목적사업 외 사용된 매각 대금에는 증여세를, 전용계좌 미사용 금액에는 가산세를 물렸다.

또 다른 공익법인 E사는 출연 받은 주차장 부지를 출연자 아들에게 무상 임대해 특수관계인 내부거래금지 규정을 위반했다. 국세청은 공익법인의 주차장 임대 수입 관련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 등을 검토해 부지 무상 임대 사실을 잡아냈다. 현행법상 공익법인이 출연 받은 재산을 출연자나 특수관계인에게 정당한 대가 없이 사용하게 하면 증여세를 과세한다. 국세청은 해당 출연재산가액 전액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했다.

한 기업 계열의 공익법인 F사는 이사장 아들과 계열기업 퇴직임원 등 상·증여세법상 특수관계인을 임직원으로 채용했다. 출연자의 자녀, 계열사에서 퇴직 기간이 5년 이내인 임원을 공익법인 임직원으로 채용하면 특수관계인 채용제한 규정을 어긴 것이다. 이에 국세청은 공익법인이 특수관계인 임직원에게 지급한 급여, 복리후생비 등 직·간접경비 전액에 가산세를 부과했다.

한편 국세청은 비영리 법인인 공익법인의 사회적 역할을 감안해 출연 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면제 등을 지원하고 있다. 동시에 빅데이터 기반 분석시스템을 구축해 의무 위반 여부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불성실 혐의 법인은 지방청 '공익법인 전담팀'에서 전수 검증하는 등 공익성 검증도 강화하고 있다. 이를 통해 최근 5년간 282개 법인에 대해 총 1569억원을 추정했다.

뉴시스

횡단보도 건너던 80대, 좌회전 시내버스에 치여 숨져

시내버스 신호에 맞춰 좌회전하고 있던 것으로 파악

횡단보도를 건너던 80대 남성이 좌회전하던 시내버스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1일 전북 익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51분께 익산시 부송동의 한 사거리에서 좌회전하던 시내버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A(81)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머리 등을 크게 다친 A씨는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당시 시내버스는 신호에 맞춰 좌회전하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도 청색 신호에 맞춰 횡단보도를 건넜지만 걸음이 느려 제때 건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재환기자

신문인쇄 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주)남도프린테크는 신문사 법인설립, 신문발행업 등록, 편집, 인쇄까지 토탈 서비스 가능한 업체입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광주·전남 최초로 신문윤전판 출력시스템 도입
- 월등한 색상 구현력에 더러움 현상은 최소화!
- 최상의 인쇄 품질로 고객 만족을 실현하겠습니다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803번안길 93-10(용동) 평동산단 3번도로 끝
Tel : 062)943-0135~6 Fax : 062)943-0134 담당자 : 010-2656-4747(장상문 전무)

